

이상현, 남원교통산성 복원·활용 촉구

(도의원)

1973년 도 문화재 지정 이후 거의 방치한 꼴... 집중적 학술발굴조사로 국가사적 지정신청 재추진해야

전북도의회 이상현 의원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무가 있는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남원시를 대표하는 역사유적 중 하나인 교통산성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면서, 교통산성의 온전한 복원과 폭넓은 활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통산성은 우리나라 성곽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역사유적으로서 1973년 전라북도기념물 제9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문화재 지정 이후 44년이 지난 지금 가장 중요한 학술발굴조사와 성곽보수공사의 진척 정도는 미미하기만 하다.

보수공사는 1998년에 들어서야 뒤늦게 시작됐고 그나마 2003년을 끝으로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진 게 전부다. 구간으로 보면 260.6m로 교통산성 전체 길이인 3,288m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학술발굴조사 역시 44년 간 총 두 차례 이루어진 게 전부여서 교통산성에 관한 객관적인 학술고증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집중적인 학술발굴조사로 교통산성에 관한 역사적 실체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해 무산된 바 있는 국가사적 지정신청을 재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현 의원은 "교통산성은 성벽이 잘



「일자리 화이팅」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 총무전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후 이용섭 부위원장 등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아 있는 구간이 전체의 1/3이나 되므로 산성을 복원하는 데 용이하다"면서 "앞으로 도와 남원시가 학술발굴조사에 집중적 인 재원투자와 함께 교통산성을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양성빈 도의원, 고향기부제 실효성 있는 입법 필요

행정자치부가 입법준비 중인 가정 '고향사랑 기부제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21일 양성빈 의원에 따르면 '한국형 고향기부제' 도입을 최초로 제안해 대선공약으로까지 이끌어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포함해 고향기부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세부적인 정책들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 '고향사랑 기부제법' 관련 논의에서는 고향기부자에게 고향 농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하는 방안과 기부금액의 세액공제 상한액 폐지 및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는 "고향기부제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리고 고향기부를 활성화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양성빈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344회 정례회에서 채택, 행정자치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송성환 도의원, 도공무원교육원 핵심리더과정 특강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 3)은 21일,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핵심리더과정 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송성환 도의원의 이번 특강은 시의원과 도의원으로 의정활동 중 공무원들과 겪었던 경험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소통과 대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를 처리할 때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려는 긍정적인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송성환 도의원은 특강이 끝난 후 일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공무원으로서 보람과 확신을 가지고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강경화, 日에 "대다수 국민 위안부 합의 수용 못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일본 측에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러한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약 20분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10억엔의 성격도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보다 더 면밀하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분석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다"고 한 바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양국 장관 모두 잇따른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한·일과 한·미·일 공조하에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양국 장관은 올해 일본에서 개최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통화는 강 장관의 취임 축하를 위해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기시다 외무상은 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일본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과 국민 간 교류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뉴시스

文 경제팀 3인방 첫 회동 "한 목소리 낼 것"

장하성 "부총리가 경제 중심, 국민들께 알리러 왔다"

김상조 "재벌개혁, 신중·합리적·일관성·예측가능성 있게"

문재인 정부 경제팀 리더들이 21일 처음으로 현안간담회를 진행,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내어준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직무실에서 현안간담회를 주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의견을 나눴다. 처음으로 열린 현안간담회에서 먼저 강조된 것은 소통과 일관성이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시장과 국민들께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내고, 예측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면서 "우리 경제팀이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와 격의 없이 (대화) 기회를 갖자"고 말했다.

이어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격의없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며 "대신에 이 안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경제팀 현안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팀 내부에서) 토의와 논쟁을 벌일 것이고, 나름대로 방향을 잡을 것

이다"면서 "앞으로 내각이 구성되면 경제팀 장관들 모시고 경제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실장은 "셋이 함께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들께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잘 챙겨가고 있다는 신뢰의 출발점이 된다"며 "재벌개혁은 공정위가 중심돼 틀을 만들고, 경제비전은 당연히 부총리가 맡고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나는 어떻게 도와드리느냐가 과제"라며 "과거에는 서벌관회의 같은 것이 있었는데, 부총리가 경제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위해 부총리 직무실에 왔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개혁은 정권 초기에 하지 않으면 잘 안되는 과거 사례가 많다. 재벌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산업개혁 등의 과제가 있는데 경제 현안에 있어 국가 경제 전체를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가는 틀을 만들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경제팀이 원팀으로 원보이

스를 내야한다. 시장과 기업에 대해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서 "경제팀 현안간담회를 자주 열어달라"고 호응했다.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여러 거시지표가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지만, 체감 경기가 고용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이중적인 상황"이라며 진단했다.

장 실장은 "우선 당장 현안이 돼 있었던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를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적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부동산이 움직일 때 국민의 삶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알고 현안은 챙기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민주주의라는 큰 틀을 말씀했고, 부총리도 큰 그림의 경제정책을 하는 것으로 안다"며 "새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방안은 일정 시점에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이 오는 23일 4대 기업과 만나 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로 한 만큼, 재벌개혁과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김 위원장은 "4대 기업을 만나 공정위의 입장을 전달하고 부총리 및 경제팀의 입장도 전달할 것이다"며 "다시 한 번 부총리 지시사항 등을 여쭙어 이 자리에 왔다"고 했다.

이어 "재벌개혁 정책은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예측가능성 있게 가야한다"며 "공정위 기업 정책은 거시와 산업의 조화가 진행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공정위가 정부 일원으로 충실히 협의하고 협조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도 공정한 시장질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엄중히 처벌하고,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투자·상생협력에 적극 나서는 기업은 지원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빨리 국회를 넘어야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현안 간담회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모여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결정된 방향으로 경제팀이 하나가 돼 추진하고, 시장에도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이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은 학교에서
복합한 교육공동체

“이것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